

## “껍데기만 통합 거부” 정부 성토장 된 특별법 공청회

광주·전남 요구 374개 특례 중 119개 조항 정부 부처 불수용 강력 반발  
신정훈 위원장 “정부 분권 의지 미흡”…강기정 시장 “20조 지원 명문화”

국회와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남  
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 
를 강하게 질타했다. 〈관련기사 3면〉

지역의 여망을 담아 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 
를 위한 특별법안’에 수록한 374개 특례 가운데 무  
려 110여개 조항이 정부 부처에서 불수용됐기 때  
문이다.

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본관 제3회의장에  
서 ‘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 
공청회’를 개최했다.

이날 회의는 광주·전남을 비롯해 대구·경북, 대전·  
충남 등 3개 권역의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 
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신정훈 행안위원장은 “최근 통합 특  
별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안타까운 심정  
이다”고 포문을 열었다.

신 위원장은 “광주·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 
요구한 374개 특례 중 119개 조항이 불수용되었다  
고 한다”며 “정부의 태도는 단순히 두 이름을 하나  
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”고 비판했다.

방청석에 자리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발언 기회  
를 얻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.

강 시장은 “통합 추진 35일 만에 386조 중 110  
개 정도의 조항이 부동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  
격을 받았다”며 “대통령께서 약속한 4년간 20조원  
지원 방안이 현재 특별법 발의안에 담겨 있지 않을  
뿐만 아니라 할애 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  
걱정이 크다.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특별법 조  
항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강 시장은 특히 지역 미래 산업과 직결된 에너지  
관련 특례, 영농형 태양광, 차등 전기 요금제, 인  
공지능(AI) 관련 특례 조항 등이 부처에서 부동  
의 된 점을 지적하며 “핵심 특례들이 시범적으로  
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기업이 지역으로 옮을 수 있  
다”고 주장했다.

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통합 특별법  
에 담긴 핵심 특례 조항들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이  
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.

김 차관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119개 핵  
심 특례 불수용 건에 대해 “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  
은 상태”라며 “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

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다”고 답변했다.

특히 지방채 발행 한도 예외 적용과 재정 위기  
단체 지정 배제 등 차지 재정권의 핵심 조항에 대  
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.

김 차관은 “지방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  
가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또한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는 특목고 설립 권한  
이양에 대해서도 “교육부의 수용 범위를 존중할  
수밖에 없다”며 잘라 말했다.

김 차관은 “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매년 5  
조원 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  
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위해 재정지원 TF를 운영  
중이다”고 답했다.

그러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 
대해서는 “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재정 당국  
과 고민하고 있으며,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 
인 이양 방안을 검토하겠다”고 원론적인 답변을  
내놓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.

신정훈 행안위원장은 “대통령은 서울시 수준의  
대우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, 정작 실무 부처는  
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”며 “이것이 정부  
가 말하는 분권의 실제냐”고 직격했다.

신 위원장은 김 차관의 답변을 두고 “정부의 태  
도는 단순히 두 이름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 
불과하며, 지방에 성장을 주도할 권한을 줄 의지  
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”고 꼬집었다.

공청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국세의 지방세 이양  
과 같은 구조적인 재정 분권 없이는 통합 시너지를  
내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.

신 위원장은 “허울뿐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 
없다”며 이번 주 내로 예정된 소위원회 심사에서  
강력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.

한편,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가 부동의한 110  
여개 특례 조항을 법안에 관철시키기 위한 승부수  
를 던졌다. 양 시도는 지난 8일 열린 제5차 지역  
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9일 밤 국무총리와 담판  
면담을 가질 예정이다.

양 시도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핵심 특례 수용 방  
안을 전달하고,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권  
한 이양을 최종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.

양 시도는 “정부가 특례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  
제출하는 경우, 정부는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  
다”며 “국회에서 특례 조항을 통과시킨다면 정부  
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

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출전하는 이준서, 김길리 등 대표팀 선수들이 8  
일(현지시간)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훈련 중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### 쇼트트랙의 날 밝았다

한국팀, 올림픽 금빛 질주 시작

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혼성계주를 신호탄으  
로 올림픽 메달 레이스에 돌입한다. 〈관련기사 22면〉

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  
전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 오후 7시 59분  
(한국시간)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  
레나에서 열리는 혼성 2000m 계주 준준결승을 시  
작으로 메달 사냥에 나선다.

쇼트트랙은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 
많은 메달을 수확한 ‘효자 종목’이다.

쇼트트랙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2년 알卑  
르빌 대회부터 2022년 베이징 대회까지 금메달  
26개를 포함해 총 53개의 메달을 따냈다.

이번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쇼트트랙의 금빛 질  
주를 기대하고 있다.

혼성계주 대표팀은 여자 최민정(성남시청)·김  
길리(성남시청)·노도희(화성시청), 남자 임종언  
(고양시청)·황대현(강원도청)·신동민(고려대)으  
로 구성됐다.

혼성계주는 한국 쇼트트랙에서 아쉬움이 남았  
던 종목이다.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 2022 베  
이징 대회에서는 준준결승에서 넘어지는 악재로  
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. 대표팀은 이후 국제대회  
에서 꾸준히 호흡을 맞추며 전력을 끌어올려  
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혼성계주에서 금메  
달을 차지했다. 대표팀은 ‘에이스’ 최민정을 선봉  
에 세워 초반 흐름을 잡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.

혼성계주와 함께 여자 500m·1000m, 남자 500  
m·1000m·1500m, 여자 3000m 계주, 남자 5000m  
계주 등 총 9개 세부 종목이 연이어 치러  
진다.

한편, 스노보드 알파인의 ‘베테랑’ 김상겸(37·  
하이원)이 9일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  
내면서,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자 올림픽 통산  
400번째 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웠다.

/박연수 기자 training@kwangju.co.kr

### 검찰, ‘1억 공천현금’ 강선우·김경 구속영장 청구

공천현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 
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.

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 
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  
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.

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 
지 나흘 만이다.

검찰은 “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, 범  
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  
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”고 말했

다.

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 
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 
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.

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  
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  
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 
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. 〈연합뉴스〉

다시 윤빛 도는 피부  
설화수 윤조에센스

Sulwhasoo

